

‘Science People’ 지상대담은 제17대 국회에 비례 대표로 등원한 열린우리당 홍창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국회의원에 대해 각기 설문지를 보낸 후 그 답변을 받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편집자註)

❶ 과학기술인으로서 국회에 등원하신 감회, 또는 ‘정치하는 과학자’로서의 포부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 해주십시오.

홍창선 의원 : 과학기술계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직능대표로서 국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줄곧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공계 교육, 연구개발, 벤처기업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충실히 전달하고, 문제점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 전도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국회에도 과학기술 중심사고가 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사이앤티크 포럼(Sci & Tech Forum)’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 제가 이번 17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사실 이공계 위기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공계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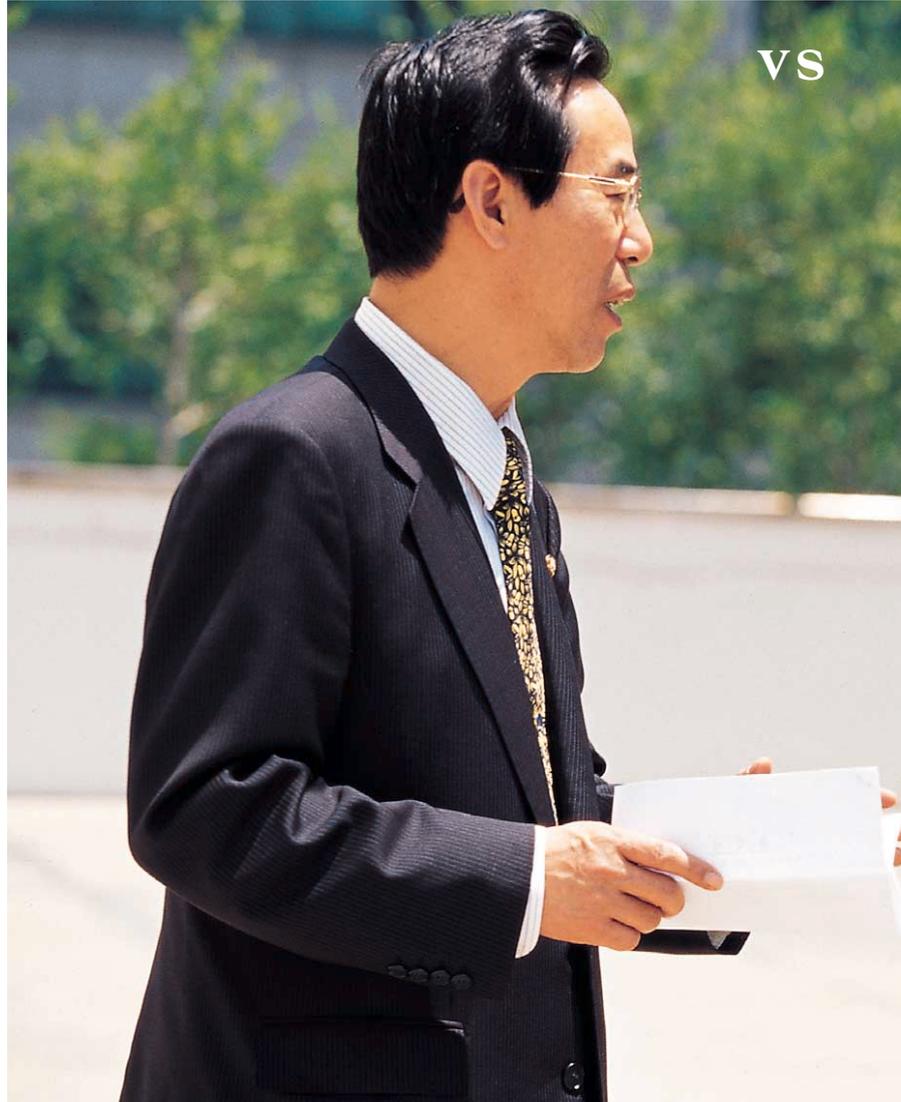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가 침체되어 있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쉽게도 17대 국회에 진출한 이공계출신, 과학기술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중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에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VS



저는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지만 지난 30년간 과학기술과 함께 해왔습니다. 국내외 산학연(포드자동차, 호서대, 한국기계연구원 등)에서 쌓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 한마디로 과학기술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과학기술인 평생 지원정책을 만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 진출한 이유이며,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거시적인 과학기술 정책 방

향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기 의원 :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엔진입니다.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9년째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3.1%로 5년 만에 최저상태로 멈춰있고, 신용불량자 400만, 청년실업 87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해마다 이공계기피 현상 심화,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기술료 지출이 수입보다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시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거시적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과학기술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R&D 투자 7% 확대, 기초과학분야 예산확대, 과학기술인 연금 도입, 출연연구소 기본인건비 70% 확대, R&D특구법 등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과학기술 공약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공약은 몰라도 과학기술인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홍창선 의원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기초·공공·복합·거대 기술개발은 정부주도로 하고 기타 산업기술개발은 민간주도로 수행하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총괄하는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학기술인 뒷받침”



〈서상기 의원〉

197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2003	전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협의회회장
1972	Wayne State University 석사	2002 ~ 2004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특별지문위원
1976	Drexel University, 박사	2000 ~ 2004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1992 ~ 1998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2000 ~ 2002	경남미래산업재단대표이사
1991 ~ 199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1993 ~ 1998	한국산업기술인회 회장
200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정책특보	2001 ~ 2004	ECO2 포럼 자문위원
1976 ~ 1981	Wayne State University 겸임교수	2003 ~ 2004	환경기술심의위원회 위원
1978 ~ 1980	Ford 자동차 연구소 선임연구원위원	1999 ~ 현재	호서대학교 환경안전공학부 교수(신소재전공)
		2004 ~ 현재	17대 국회의원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첨단과학기술, 특히 원자력,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윤리와 안전성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홍창선 의원 :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이나 인간복제금지 등의 생명윤리가 확고하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뚜렷한 과학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고 막연하게 안전 또는 윤리 문제를 사회 쟁점화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생명과학의 일부 분야는 우리 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안전·윤리 확보가 잘 조화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구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상기 의원 : 원자력 안전문제나 생명윤리 문제의 중요성은 인류 복지, 인간의 존엄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안전문제는 정부, 시민단체, 과학계 등 관

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해서 설득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명윤리 문제는 생명공학 분야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안전성이나 윤리 문제는 우선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대국민 설득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 **최근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등 참여정부가 내세운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의 구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홍창선 의원 : 며칠 전 제17대 국회 개원식에서 대통령도 강조하셨듯이 핵심인재와 기술혁신이 미래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하도록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하루 빨리 범정부차원의 체제개편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연구개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지겠지만, 가급적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상기 의원 : 국가의 과학기술 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가 R&D 예산의 배분, 조정권을 과기부에 준다는 것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 정비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흡합니다. 오랫동안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의 스펙트럼을 달리 하면서 경쟁해 온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R&D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더구나 정부출연(연)의 기능재정립이나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표출될 문제점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극복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아울러 출연연의 R&D활동도 벌써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혼란을 겪어본 연구원들을 또 다시 불어온 개편바람을 식상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저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임기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창선 의원 :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이를 정치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 내의 '과학기술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의 이공계 교육 경험을 살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이공계대학 학생들의 실험실 안전 확보에도 관심이 큼니

다. 작년 이맘때에 KAIST에서 아끼던 제자들이 사고로 희생된 것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실험실 안전 확보와 만일의 사고 시의 보상에 관한 법 제정을 검토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도개혁이나 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가꾸어 나간다면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할 거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펼쳐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터전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양성, 우수 이공계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군대체복무 확대,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도입, 국립과학현충원 조성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법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과학기술 지방화와 국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대전)뿐만 아니라 영남권(대구)과 호남권(광주)을 포함하는 R&D 특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지역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모델의 지역특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해서는 해외 유명 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연구소의 해외 이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류두뇌와 첨단기술을 통해 국내 R&D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연구개발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보통신, IT분야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가칭 'e-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어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 확산은 물론 e-비즈니스 강국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국회 연구모임 등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는 깊어만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공계기피 등 최근의 사회문제를 진단해주시고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기 의원 : “나는 이공계지만 내 자식은 절대로 이공계 안 보내겠다”는 어느 이공계 아버지의 절규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듯이 이공계 기피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원책보다는 평생지원책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공계출신이 희망을 가질 여건이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1천37명, 복수응답)를 보면 85.8%가 대우수준이 낮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음, 83.9%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45.6%가 기술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34%가 황금만능주의의 병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전공 이기주의보다는 산업현장에 맞도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에서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사기진작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매년 7.14일 혁명 기념일에 파리지네 개 선문을 지나는 군사퍼레이드에 정규 사관생도가 아닌 기술대학 학생들을 선두에 내세우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전성시대부터 지켜온 이공계 우대정신이 국가적 전통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고, 포병장교였던 나폴레옹이 기술계장교를 중시한 것이 드골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양산된 엘리트 과학기술인들이 핵관련기술과 항공우주산업은 물론 엑조세 미사일과 라팔 전투기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방위산업, 영불 합작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와 초고속열차인 테제베(TGV) 등을 개발해 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한 수 더 위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가히 국가자체를 경영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권력구조가 이공계주도로 짜여있습니다. 국가주식 후진타오와 실세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이공계출신이며, 핵과 미사일, 인공위성개발에 기여했던 노 과학자 첸쉐선(錢學森)박사의 생일에 장쩌민주석이

친히 자택을 방문하여 경의를 표할 정도로 영웅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최고액수의 명예로운 상이 된 ‘과학기술대상’에 매년 두 명을 선정하여 8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을 국가적 목표로 밀고나간 결실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째의 유인우주선 발사를 가능케 한 저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창선 의원 :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은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비하여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대우가 타계열로 진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 때는 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꾸다가도 어느 정도 세상을 알게 되면 그 꿈이 의사, 판·검사 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공계 출신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같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과학기술자들끼리 그 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KAIST 후임총장으로 러플린 교수가 내정되었는데...**

홍창선 의원 : 얼마 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러플린 교수가 KAIST의 새 총장으로 부임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교육시스템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그가 국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해당대학의 교직원들로서는 불편함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총장으로 모셔온 이상 학교든 정부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열정과 실력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계의 히딩크도 될 수 있고 코엘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AIST 교수직원과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다면 KAIST는 분명이 보답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상기 의원 :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큼니다.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IMF 이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위축,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화 등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이 과학기술계에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50년대~70년대 국가경제를 부흥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들어서기까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소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정부도 과감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 노력한다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더욱 더 높여야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위상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관련 모임이나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면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은 물론 법제도화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창선 의원 : 지난 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존중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지 위에서 우리의 미래 또한 과학기술인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잃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과학기술인으로서,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인을 대표해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을 위해서 국회에서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㉓



“국회내에서 ‘과학기술 전도사’ 될 것”

〈홍창선 의원〉

- 1967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1977 미국 Penn State University 공학박사
- 1977 ~ 1979 NASA-Langley Research Center, 연구원
- 1979 ~ 현재 KAIST 기계공학과 항공우주전공 교수
- 1985 ~ 1986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객원교수
- 1986 ~ 1986 Wright-Patterson 미공군항공연구소, 초빙과학자
- 1996 ~ 1997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 1999 ~ 2002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 2003 ~ 현재 국제복합재료연합회(ICCM) 부회장
- 1997 ~ 2000 항공우주산업정책 심의위원
- 1999 ~ 20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전문위원
- 2001 ~ 현재 일본 총산업연구회(AIST) 지문위원
- 2002 ~ 2004 정부출연기관장 협의회 회장
- 2003 ~ 20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 2003 ~ 2004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문위원
- 2001 ~ 2004 KAIST 총장
- 2004 ~ 현재 17대 국회의원